

보도	2026.7.15.(수) 14:00	배포	2026.7.15.(수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	책임자	국 장	심은섭	(02-3145-7160)
		담당자	팀 장	이승훈	(02-3145-7154)
	한국핀테크산업협회	책임자	사무국장	정진국	(02-6949-2680)
		담당자	실 장	장수황	(02-6949-2680)

PG사의 부정결제 예방·대응체계 강화를 통해
온라인 결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.

- 「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」 출범 -

I 개요

- '26.7.15.(수), 금융감독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주요 PG사와 학계·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「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*」를 출범하였음
 - * 금감원, 핀산협, 주요 PG사, 금융보안원, 실무·학계 자문위원 등
- 최근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간편결제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, 개인정보 탈취 등에 의한 부정결제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
- 온라인 결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결제 안정성을 높이고 부정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함

부정결제 대응협의체 출범식 개요

- **일 시** : '26. 7. 15.(수) 14:00~15:00
- **장 소** : 여의도 OneFC 16층 세미나실
- **주요 참석자**
 - (금감원) 이종오 디지털·IT 부원장보, 전자금융검사국장
 - (핀산협·업계)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, 주요 PG사*
 - * 네이버파이낸셜, 카카오페이, 비바리퍼블리카, 당근페이, 헥토파이낸셜, 쿠팡
 - (외부자문위원) 금융보안원, FDS·AML 실무·학계 전문가 등

Ⅱ 참석자 발언 요지

1. 부원장보 당부사항

- 이종오 부원장보는 온라인 결제가 일상화된 가운데, 부정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히면서
 - PG사 등이 이용자 편의성과 수익 확대에만 치중하여 부정결제 사고를 방치한다면 결국 이용자 피해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므로 부정결제 방지와 보안 강화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
- 또한, 금융회사의 FDS가 걸러내지 못한 이상거래를 PG사도 차단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언급하면서,
 - 이러한 문제는 개별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업권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,
 - 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권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정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
 - 금감원도 협의체가 마련할 표준 실무지침이 감독제도와 조화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힘

2. 핀산협 회장 및 협의체 참여기관 발언

- 김종현 회장(공동위원장)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업계의 책무임을 강조하고,
 - 고도화·지능화되는 부정결제 수법에는 개별 회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가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
 - 이에 협회도 협의체가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, 업계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힘

- 협의체에 참여하는 PG사들은 부정결제 대응이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업계 공통의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, 회사별로 축적해온 이상거래 탐지 경험과 대응 사례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힘
- 아울러 이번 협의체를 통해 마련될 표준 실무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, 실무 관점의 의견을 성실히 제시하며 지침 마련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
- 고철수 위원(공동위원장,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부회장) 등 외부 자문위원들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정결제 예방에 나선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,
- 그간 FDS·AML 등 컴플라이언스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힘

Ⅲ 향후 협의체 운영 계획

- 「부정결제 대응협의체」는 업계 보안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부정결제 예방·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,
- FDS 분과와 AML 분과 2개로 나누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하반기 중 「부정결제 예방·대응 표준 실무지침」을 마련할 계획임
- 추진 일정
- ('26.7.15) 협의체 공식 출범, 운영계획과 분과별 추진 방향 확정
- ('26.7~10월) 업권 사례를 토대로 현황·문제점을 공유·진단하고, 「부정결제 예방·대응 표준 실무지침」 초안 작성 후 의견 수렴
- ('26.11월) 최종 표준 실무지침 확정 및 결과 발표 세미나 개최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